

투데이 칼럼

‘간병 파산’과 ‘간병 지옥’ 벗어날 공공-민간 복합형 지원체계 시급

대한민국이 세계 어느 나라 보다 빨리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절박한 문제는 바로 간병 수요의 급증이다. 간병은 더 이상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영역이 아니라, 이미 ‘간병 파산’, ‘간병 지옥’이라는 극단적인 용어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였다.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명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전주11)이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한 간병지원 제도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하며 국가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건의안 채택은 간병파산을 막아야 사회가 보다 안정화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보며 온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연구해서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병 서비스 구조는 심각한 모순을 안고 있다. 간병 서비스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양병원 및 장기입원 환자의 간병비를 국민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실제로 국민이 지출하는 간병비는 2008년 약 3조 6천억 원에서 2018년에는 8조 원을 초과했으며, 최근 들어 그 증가세는 더욱 가팔라져 국민의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심지어 환자 3~4명이 공동으로 간병인을 고용하더라도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할 경우, 일반 가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현행법과 제도에 간병과 관련한 근거가 제대로 없는 것이 문제다. ‘건강보험법’의 급여 항목에 간병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국민 다수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기존 법령에 간병 관련 조항이 존재하긴 하나 그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다. 게다가 ‘간병’, ‘요양’, ‘돌봄’ 등의 용어가 부처별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제도 간 연계성과 통합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김명지 의원은 단순히 간병비 전액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식은 재정 지속 가능성이 작다는 점을 지적하며, 민간과 공공이 역할을 분담하는 복합형 지원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해서 주목받는다.

이는 영국이 자가형 민간 간병보험을 운영하여 수혜율을 높이고, 미국이 민간 보험에 공적 기능을 부여하는 사례(보험금 면제, 보험료 인상 제한 등)를 참고하여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지는 제안이다.

김 의원은 발의한 건의안은 이 위기를 극복하고 체계적인 지원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추진해야 할 네 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담고 있어 주목하게 된다.

첫째, 제도적 공백 없는 실질적인 간병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법’ 및 ‘건강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 산재된 간병 관련 조항을 정비해야 한다.

둘째, 간병·요양·돌봄을 아우르는 통합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간병의 정의와 지원 대상 및 영역을 명확히 하

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맞춤형 간병 지원 제도를 확립하여 국가가 취약계층을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넷째, 민간 간병보험에 공공성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구체적으로 세액공제, 보험료 인상 억제, 보험상품 표준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간 보험이 공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김명지 의원은 정부가 법적·제도적 정비와 더불어 이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수행하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간병 지원 제도를 구축할 의무가 있음을 건의안에 천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173인 도민을 대표하여 이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김명지 의원처럼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 생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 마련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건의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이 계속될 때 국민의 삶은 점진적으로나마 나아지게 된다고 필자는 확신한다.

‘간병 지옥’의 고통을 끝내고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조속하고 전면적인 대응이 시급한 시점이다.

나왔다(평균 총대장균 개체수가 2급수 기준치(100㎍당 1천마리)). **참고, 수질분석원:전북대학교물환경연구센터

원인은 이곳으로 빗물만이 유입돼야 하는 우수 관로를 통해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인분이 원인인 분원성대장균이 유입되고 있고, 이 대장균은 인분의 결과물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러한 수치를 받아들이는 두 기관의 생각 또한 각각 소속 기관의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또한 군산시청은 은파 유원지 내로 흘러 유입되는 우수관로 현황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확실한 데이터마저 현실 조사 없이 농어촌공사 군산지사의 현황조사 뒤에서야 이를 파악하고 있는것 같아 이또한 두 손 놓은 군산시청의 안일한 모습에 할말을 잃게 만들었다.

이 모든 피해는 군산시민의 몫이 될 것이다.

다시한번 두기관에 바란다. 아물담고 편한 그리고 언제나 건강한 은파를 시민의 곁에 머물게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시민 모두가 두 눈을 크게뜨고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사설

도시도 ‘소멸 위기’

인구 감소에 따른 소멸 위기는 주로 군 지역 문제로 치부됐지만 이제는 전북의 대표 중소 도시들까지 바꾸고 있다. 정읍에서 가장 유동인구가 많다는 정읍역 앞 상점가는 버스타기까지 끼고 있어 북쪽은 상권으로 꼽히는 곳이다. 저녁 7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지만 벌써 저녁 장사를 접고 문을 걸어 잠근 식당들이 많다.

3년 전부터 팔죽집을 운영하는 곳은 인수 당시에는 저녁 8시 30분까지 문을 열었지만 점점 앞당겨져 최근에는 6시 30분에 문을 닫는 일이 잦다.

도심 주유소도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정읍의 변화가인 수성동은 밤 9시가 넘어가자, 골목의 대부분 인적은 끊겼다. 노대방이나 주점 같은 곳 정도가 불이 켜져 있고 대부분 식당이나 상가는 문을 닫았다.

10시 넘어오면 사람 자체가

움직임이 없다. 남원의 가장 큰 변화가, 도동동 역시 사정은 다르지 않다. 9시가 조금 넘은 시각, 길을 따라 늘어선 상점들은 일찌감치 문을 닫았다.

문을 연 맥줏집도 주인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다. 버스회사들은 버스 운행 시간과 횟수를 줄였다. 먼 지역으로 가는 버스는 해가 지기도 전에 막차가 떠난다. 집으로 가는 마지막 버스는 6시 50분이다.

10년 전 남원지역 시내버스의 운행 종료 시간은 9시 45분이었지만 지금은 40분 앞당겨진 9시 5분이다. 운행 횟수도 40%나 줄었다.

남원의 대표 관광지 광한루 주변도 밤에는 깊은 정적만이 감돈다. 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쉽게 끊어낼 수 없는 이유다. 인구 감소는 단순한 통계를 넘어 시민들의 삶까지 바꿔놓고 있다.

경기도 양평 개발 특혜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 부검을 실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양평군청 소속 50대 공무원 A 씨에 대한 부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정과 관련해 “유족이 일부 원하고 사안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A 씨는 경기 양평군 양평읍 아파트 자택에서 유사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는 지난 2일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특검팀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 씨 가족 회사가 2011~2016년 양평 공흥 지구에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

부담금을 내지 않은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당시 A 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 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조사는 강압적인 분위기도 아니었고 회유할 필요도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특검팀은 이어 “A 씨가 지난 2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조사받기 시작해 이튿날 오전 0시 52분 쯤 조사 열람을 마치고 귀가했으며, 점심·저녁 식사 시간과 3회의 휴식시간을 보장해줬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 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SNS 상담 마들랜(www.129.go.kr /etc /mad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

